



마늘 산업, 이대로 끝나야 하는가?



1

청와대, 외교통상부, 농림부, 산업자원부의 대국민합작 사기극

7월 16일, 한 언론사가 2000년 한·중 마늘협상에서 2003년부터 세이프가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은폐해왔다는 내용을 폭로함으로써, 마늘을 둘러싼 정부의 사기극은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현 정부의 도덕성과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50만 마늘농가의 생존권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전체 400만 농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게 되었다.

그러나, 무역위원회는 7월 29일 마늘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세이프가드 연장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빠져 버렸다. 이 과정에서 무역위원회의 전성철 위원장은 기각 결정 과정에 독립성이 훼손당했고, 정부가 내놓은 마늘산업종합대책을 검토해 볼 시간도 없었다면서 사표를 제출해 버렸다.

이렇듯, 정부는 한·중 마늘협상 은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을 무역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하여 기

각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대국민 합작사기극을 마무리지었다. 그리고, 마늘산업종합대책을 내 놓음으로써 이번 사기극을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 과연 마늘산업종합대책은 획기적인 것인가? 아니면, 기만적인 정책에 불과한가?

2

마늘산업종합대책의 문제점

1) 마늘산업종합대책 자금 투입 계획(2003년~2007년) - 우측 <표> 참조

2)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경쟁력이 높아질까?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력 제고 사업은 값싼 중국산 마늘의 유입으로부터 국내 마늘산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다. 이 사업의 경우 2002년과 대비해서 5개년 평균 400억원이 증가하여, 정부가 마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순수마늘산업 지원은 오히려 축소되었다.

● 마늘산업종합대책 자금 투입 계획(2003년~2007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2007	5개년 평균	증 감
경쟁력 제고	4,505	10,483	245,200	49,040	38,557
종구개량 사업	674	5,150	15,000	3,000	△2,150
마늘기계화	1,856	992	6,500	1,300	308
생산유통센터	710	3,232	9,000	1,800	△1,432
생산기반정비	-	-	203,300	40,660	
연구개발	-	-	1,000	200	
경영체협의회 육성	-	-	500	100	
농안기금 출연	-	-	9,900	1,980	
기타	1,265	1,109	-	-	
수급 및 가격안정	137,845	164,916	1,252,500	250,500	85,584
정부비축수매(최저가 수매)	23,298	13,750	115,000	23,000	9,250
농가출하 조정	11,432	20,000	-	-	
농협수매지원	4,117	12,000	-	-	
민간수매지원	17,123	25,000	162,500	32,500	7,500
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	81,875	94,166	975,000	195,000	100,834
합 계	142,350	175,399	1,497,700	299,540	124,141

첫째, 경쟁력 제고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산기반정비 사업은 매년 평균 400억원이 투입 되지만, 이 사업은 마늘만 대상이 아니라, 전체 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사업에 올려놓고 실제로는 전체 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이번 마늘산업종합대책의 허구성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종구개량(주아재배)·기계화·생산유통센터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액은 2002년 대비 약 32억원이 감소하였다. 마늘생산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주아재배의 면적이 2002년 현재 10.0%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원액은 오히려 21억원이 축소되었으며, 10a당 지원액도 2002년

100만원에서 2003년 75만원, 2005년부터는 5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 것이다.

마늘기계화 사업은 어떤가? 약 3억원이 증가하였지만, 2002년의 경우 농가의 자부담이 없었으며, 2003년부터 농가의 자부담이 50%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한·중 마늘협상의 이면합의로 국민과 농민을 속였던 정부가 내놓은 마늘산업종합대책이 너무나 부실하며, 이것마저 순수지원금액을 은폐하고 1조8천억원이 마늘에만 투입되는 것처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3) 수급 및 가격안정이 될 것인가?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 중 정부비축수매(최저가



▲ 지난 고흥군 집회에서 산업자원부장관 등의 허수아비를 불태우고 있다.

수매) 사업의 예산이 2002년과 대비해서 5개년 평균 92억원이 증가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최저보장가격은 1,850원/kg(한지형), 1,250원/kg(난지형)으로써 생산비(한지형 3,508원/kg, 난지형 1,700원/kg)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 채 단지 수매물량만 증가시키는 것이다.

또한, 국내 마늘생산량의 1/4인 11만톤을 목표로 하는 농협의 계약재배사업은 전혀 실현불가능한 대책이다.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해제할 경우, 국내 통마늘 가격이 kg당 900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농협이 손실을 보면서까지 최저보장가격(1,250원/kg)수준으로 계약재배를 하는 것은 어렵다. 계약재배로 kg당 350원의 손실을 보게 되며, 전체 계약재배 물량인 11만톤의 손실금액은 약 385억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한, 민간저장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민간수매지원 사업의 예산 증가는 정책 의도와는 전혀 다른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산 마늘이 민간에 완전 개방될 경우 민간저장업체가 손실을 보면서 국내산 마늘을 저장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중국산 마늘을 저장해 수급안정효과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4) 농가부채만 증가시키려고 하는가?

마늘생산농가를 위해 3천억원의 특별자금이 지원될 계획이지만, 이 자금이 전액 융자이기 때문에 마늘농가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농가의 부채만 증가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현재에도 마늘생산농가에게는 원예용 특작작물 자금이 융자되고 있으며, 이 자금도 연체, 중복, 신용한도 등으로 대출이 어려울 때가 많아 경영안정특별지원 자금이 큰 의미가 없다.

3

향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1) 세이프가드조치 연장을 반드시 관철시키자

무역위원회가 세이프가드조치 연장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무역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번복하고 세이프가드 연장을 관철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농협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행정법원의 조사와 판결, 그리고 이를 받은 무역위원회의 조사 개시가 즉각적으로 이뤄져 SG 연장 판정이 11월말 이내에 나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기회마저 놓쳐버리면, 세이프가드 조치는 2006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하면 세이프가드 조치를 해제하였을 경우, 조치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다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99년부터 잠정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약 3년여의 기간동안은 조치를 시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과 관련해서 전적

인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셰이프가드 연장을 신청한 농협이 이번 무역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항의해 적극적인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2) 마늘종합산업대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2003년 이후 셰이프가드조치가 연장되거나 해제되는 것과 상관없이 마늘산업에 대한 투자와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마늘이 국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마늘은 국내 경종작물 중 생산액의 3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이에 종사하는 마늘재배 농가수도 50만호로 전체농가의 37%에 해당한다. 또한, 양파, 고추 등 대체작목이 한정되어 있고, 이들 품목 또한 매년 가격이 폭락하여 사실상 마늘산업의 몰락은 전체 농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부의 마늘종합산업대책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정책으로서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3) 밀려드는 중국 농산물 수입에 대응해야 한다

중국산 저가 농산물에 의해 국내 시장은 거의 잠식되었으며, 앞으로도 중국산 농산물에 의해 농가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는 이를 막을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WTO 가입 조건을 포함한 다자간 합의문서에 기존 회원국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특별셰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이는 WTO 규정에 근거한 수입제한 조치로서 중국만을 상대로 발동할 수 있는 제도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12년간 한시적으로 발동이 가능하다. 일본도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중국 특별셰이프가드 조치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제도 및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김대중 정권 농정실패를 강력히 규탄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김대중 정권의 농정실패는 이번 마늘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농업말살 정책에 기반한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과거 김영삼 정부처럼 42조원 투자와 같이 획기적인 투자도 없이 WTO협상과 한·칠레 FTA추진 등 농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농업개방정책을 가속화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이 부족한 우리 농업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농산물생산비 보장 대책이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없이 농민들을 시장기능에 맡김으로써, 농업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민의 높은 지지 속에 출범했던 김대중 정권의 농정실패는 외부적인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 부족과 철저히 농업을 배제하여 생긴 의도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농업 앞에는 WTO협상의 진행과 FTA의 추진, 만성적인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안정 등 매우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다.

한농연은 농업을 이렇게 어려운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김대중 정권의 농정실패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오는 9월 9일 400만 농민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농업회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한농연**